

# “국가의 큰 개혁 이루는데 시금석”

민주 김윤덕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전북 경선 승리 관련  
“도민 과반 지지 절대 잊지 않을 것... 너무 고마워” 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지난 28일 전북 지역 경선에서 54.5%로 압승을 거둔 뒤 “절대 잊지 않겠다. 너무 고맙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 조직본부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27일 전북도의회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날 전북경선을 총평하며, 전북도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경선이 끝난 직후 퇴장하면서 전북이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줘서 절대 잊지 않겠다”며 “이재명 캠프의 원팀과 용광로 캠프를 위해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줄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민주당의 뿌리인 광주·전남에 이어 만약 전북에서도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졌더라면 앞으로 경기·서울 등 수도권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전북에서 압승함으로써 (이 지사) 캠프가 자만하면 국민이 안다”면서 “과반을 넘겨 결선까지 가지 않도록 남은 부울경 등 경선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이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압승함으로써 (이 지사) 캠프가 자만하면 국민이 안다”면서 “과반을 넘겨 결선까지 가지 않도록 남은 부울경 등 경선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압승함으로써 (이 지사) 캠프가 자만하면 국민이 안다”면서 “과반을 넘겨 결선까지 가지 않도록 남은 부울경 등 경선 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대장동 비리, 정부 합동 특수본 설치 수사하라”

민주 이낙연 전 대표 “곽상도, 민정수석 안했다면 50억 못받았을 것... 기득권이 자녀에 돈 세습한 것 공직자윤리처 설치, 공직자 부패수익 모두 환수할 것”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국정조사 추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구 자판리회사 화천대우에서 퇴직한 국민연립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아버지인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국기문란 고발사주 의혹과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의 분노가 끓어 달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처럼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비리 와 부산 엘시티 게이트의 진실도 정부의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추구했다.

또한 기득권 세력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인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약에 이미 약속한 ‘공직윤리처’를 반드시 설치해 모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공직윤리처’를 꼭 출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의 공무원, 공기업,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패수익은 반드시 소급 적용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에 대한 원칙도 세워 민간토지의 개발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고, 공공토지개발에는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토지점용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 차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공정 부정부패 불령등을 확실히 청산하는 것”이라며 “개혁은 원칙과 상식, 정의와 공정에 기반한 때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성공하는 개혁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소아청소년 ·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 맞는다

전북도, 4분기 접종 시행계획 발표

내달 1~16일 진행되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도 포함 추가접종 내용도 함께 담아 내달 18일부터 진행 예정

전북도는 27일 정부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분기 계획에는 18세 이상 미접종자와 소아청소년(12~17세), 임신부에 대한 접종 계획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추가접종(Booster shot·부스터 샷) 내용도 포함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역

내 18세 이상 미접종자 20만5,960명에 대한 1차접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백신 종류는 모더나로 9월30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16~17세(2004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출생)와 12~15세(2006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로 나뉘어 실시된다.

우선, 16~17세(3만5,709명)는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12~15세(6만6,693명) 접종은 11월 1일부터 27일까지로, 모두 화이자 백신이 접종되며, 각각 10월 5일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도내 임신부 접종 인원은 8,565명

으로 추정된다.

10월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며, 사전예약은 10월 8일부터 진행된다.

부스터 샷은 지난 2~4월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 31만80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치료병원 3043명(화이자), 요양병원·시설 3만6,936명(아스트라제네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관계자 1만5,113명(아스트라제네카),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25만5,717명(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면역저하자(미정, 화이자) 등이다.

부스터 샷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관계자가 10월 12일부터 등 대상군에 따라 각각 진행된다.

/유호상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만 2.5조원”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한 인원은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올해 6월까지 총 2조 4,212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들이 체불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최근 5년간 2.5조원에 달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회수율은 전체 23.1%로 저조해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5억3,899만원(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3억4,990만원), 음주운전 1,070건(1억6,900만원), 승차정원 위반 205건(820만원)이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는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호상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만에 범규위반 3만4000건”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범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

월말까지 부과된 범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한병도 의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